

해외출장복명서

기간: 2016.12.4~8(3박5일)

출장지: 오스트리아 비엔나

출장자: 이상준

I. 출장개요

1. 출장지: 오스트리아 비엔나

2. 출장기간: 2016.12.4~8(3박5일)

3. 출장자:

소속	직급	성명
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/ 한반도·동북아연구센터	선임연구위원	이상준

4. 출장목적

○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“독일과 한국의 도시비교 국제워크숍”에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참석 전문가와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함

- 추가로 워크숍에 참석한 독일전문가와 통일 후 동서독 도시분야 제도통합 경험 청취

II. 출장일정

월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업무수행내용
2016.12.4 (일)	인천	오스트리아 비엔나	-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경유 비엔나 도착 (1회 경유)
2016.12.5 (월)	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회의장 15:00-18:00		- 통일 이후 동서독의 도시분야 제도통합과 관련하여 전문가 간담회 개최 - Reinhard Breit 독일 베를린공대 명예교수 등 참석 - 통일 후 동서독의 통합과정 - 동서독 도시분야 제도통합의 경과 - 남북한에 대한 시사점 등 논의
2016.12.6 (화)	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회의장 14:30-17:00		- 구 동서독 도시비교 국제워크숍 참석 주제발표(Comparing Korean and German cities and some policy implications) - 남북한과 동서독의 도시발전 특성을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토론
2016.12.7 (수)	오스트리아 비엔나		- 귀국
2016.12.8 (목)	인천		- 인천공항도착

III. 수행사항

1.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

- 일시 및 장소: 2016. 12. 5(월) 15:00-18:00, 비엔나 대학교 한국학연구소
- 참석자: 총 3명
 - 독일측: Prof. Dr. RAINER DORMELS(비엔나대학교), Prof. Dr. REINHART BREIT(베를린 공대)
 - 한국측: 이상준책임연구원(국토연구원)
- 주요 논의 사항 요약
 -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정책연구에 있어서 독일 사례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음
 - 세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3개국(독일, 베트남, 예멘) 가운데 미래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시사점을 줄만한 조건을 가진 사례는 독일이 유일
 - 남북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수립의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동서독의 통일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음
 - 독일의 사례는 제도적, 물리적 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
 - 화폐통합, 소유권 분쟁 등 부분적으로 통합의 부작용도 나타났지만, 대체로 성공적인 통합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음
 - 각 분야별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 간 과정이 우리의 통일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
 - 독일내에서 국토분야 통합관련 연구는 주로 1990년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
 - 지역개발 및 산업입지정책

- 도시개발정책
 - 인프라개발정책
 -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정책
-
- 독일내에서 국토분야 통합관련 연구는 한국의 국토연구원과 유사한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독일연방건설청(Bundesamt fuer Bauwesen und Raumordnung: BBR 2009년 이후 독일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)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음
 - 이 기관에서 1990년대에 발간한 'Regionalbarometer neue Laender'는 동독지역의 국토분야 변화를 모니터링한 중요한 연구자료임
 - 이 기관이 통일20년을 맞아 국토분야의 공간변화와 과제를 다룬 '20 Jahre deutsche Einheit-zwei Dekaden im Rueckblick: Bundesinstitut fuer Bau-, Stadt- und Raumforschung(2010)'도 통일이 성과와 과제를 기술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
 - 이 외에도 독일연방정부차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독일통일에 대한 연차보고서(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)도 국토분야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
 - 전체적으로 볼 때, 독일의 국토분야 통일관련 연구들은 1990년대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, 2000년대 들어서는 지역균형차원의 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음
 - 주요 연구결과들은 지난 20년동안 국토통합의 성과를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, 지역간 불균형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성장동력 약화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있음
 - 우리 한국의 통일준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독일측 관련자료의 수집이 중요함
 - 통일과 관련된 논의 진행 과정에서 동서독의 공간적 통합과 관련한 핵심 과제관련 자료
 - 기본적인 인프라 연결 등과 관련된 자료

- 동·서독 통합과정에서 국토분야에서 양 지역간 격차의 축소와 관련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핵심정책관련 자료
 - 주거부문의 개선 등 생활환경의 격차축소와 관련된 자료
- 통일 이후 국토분야의 제도통합 관련 자료
 - 통일 이전 서독지역에서 적용되던 계획 및 개발관련 제도의 동독지역 도입관련 자료
- 향후 남북통일 이후 국토분야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정책자료
- 독일 정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 작성하였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작성된 자료
- 통일 이후 동서독간의 국토분야 제도 통합과 관련해서 아래 자료들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
 - 건축시행령 법(19930212-)
 - 단일건축법시행에 대한 연방하원의결사항BT-Drs.12/4317
-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주택, 건물, 지적 등 지리관련 정보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래 자료가 중요
 - 건물통계 및 주택통계 조사에 관한 법률(주택통계법)(1993.3.18)
 - 지리정보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리정보관련 문서 준비에 대한 규정(1990.3.16.)이 중요

2. 국제 워크숍 주요 내용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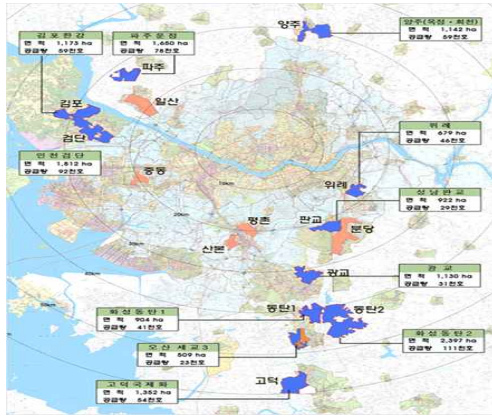
□ 일시 및 장소: 2016. 12. 6(월) 14:00-17:30, 비엔나 대학교 한국학연구소

□ 참석자: 총 30명

- 독일측: Prof. Dr. RAINER DORMELS(비엔나대학교), Dr. MANFRED KÜHN(독일 라이프니츠 사회공간연구소, 베를린), Dr. TIM LEIBERT(독일 라이프니츠 지리연구소, 라이프찌히)외 한국학연구소 관계자 및 학생
- 한국측: 이상준책임연구원(국토연구원)

가. 주요 발표내용 요약

- 1) 제1 발표 (RAINER DORMELS): 한국의 신도시개발
 - 한국의 신도시개발은 1960년대 울산(1962), 포항(1968), 마산 등 동남권 공업도시 개발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음
 - 1970년대에는 수도권외 반월(1977), 과천(1979) 등이 개발되었으며, 1980년대에는 신시가지 형태의 개발이 확대되었고, 1980년대 후반에는 20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분당, 일산 등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가 개발되었음
 - 이후 동탄 등 2기 신도시가 2000년대에 개발되었음
- 〈수도권의 1기, 2기 신도시들〉



○ 한국의 신도시들은 대량 주택공급과 함께 한국인들의 도시 생활패턴을 아파트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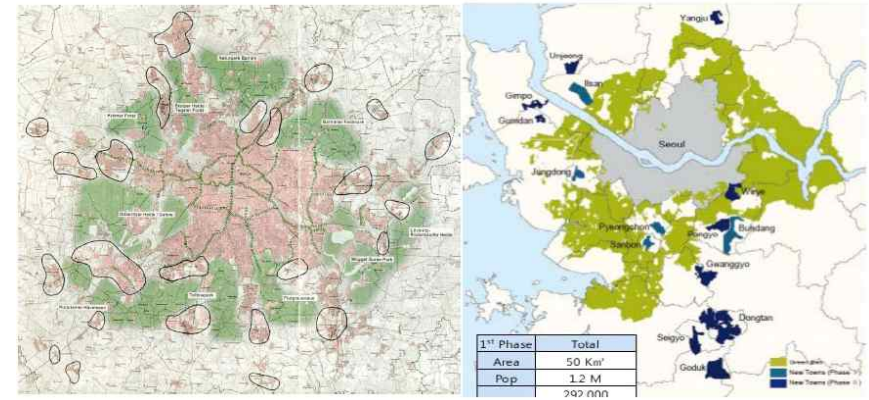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신도시개발은 저개발국에 성공적인 도시개발사례로 소개되고 있기도 함

2) 제2 발표 (MANFRED KÜHN): 베를린 대도시권: 도시확산과 녹색벨트계획-한국 서울과의 비교

○ 한국의 서울과 베를린은 대도시권으로의 유사성과 특이점을 갖고 있음

- 서울의 인구는 1,000만명, 도시권 인구는 2,300만명, 베를린은 각각 350만명과 600만명
- 서울주변에 신도시들이 형성되었듯이 베를린도 주변에 주거지가 확대되었음

〈베를린과 서울의 도시외곽 개발 확대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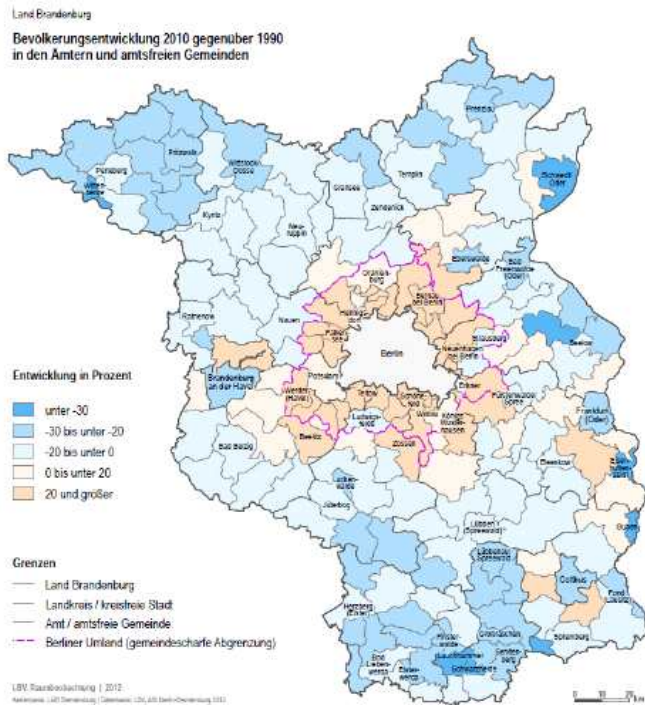
○ 독일의 베를린-브란덴부르크 도시권은 독일 최대의 도시권임

- 베를린, 베를린권, 기타 대도시권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됨
- 이 가운데 1993년과 2013년의 20년간 베를린권의 인구만 증가하고 나머지 두 권역은 감소
- 일자리의 경우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베를린권과 베를린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기타 대도시권은 감소

○ 베를린-브란덴부르크 도시권의 3개 영역 가운데 기타 대도시권의 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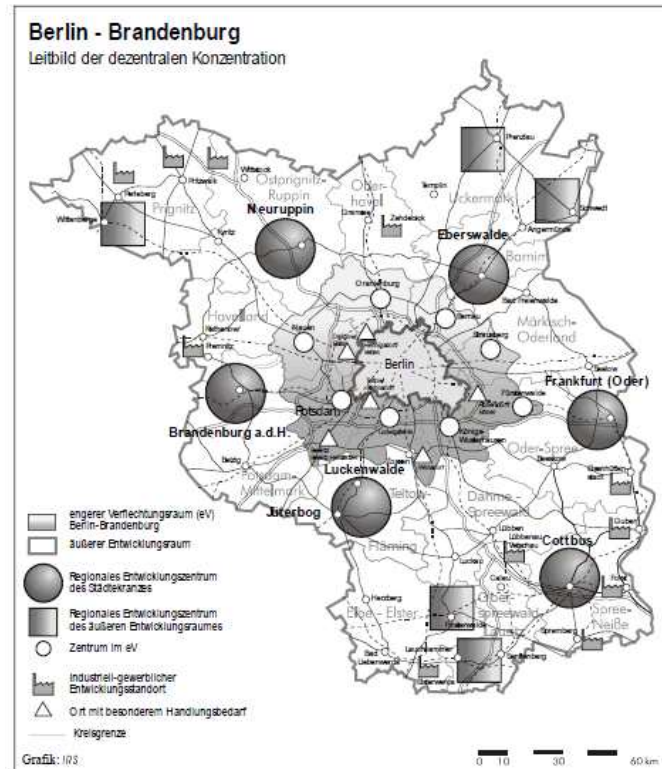
- 특히 이 지역의 중소도시들이 큰 인구감소를 나타냄(탈 공업화와 교외화 때문)

〈베를린-브란덴부르크 도시권의 인구변화〉



- 베를린-브란덴부르크 도시권의 발전을 위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공동 주계획에서 ‘분산적 집중’의 공간구조 발전이 제시된 바 있음
 -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부족으로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음
 - 투자는 주로 베를린 인근지역에 집중되었음
 - 공간계획에서의 패러다임이 균형정책에서 성장정책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미쳤음

〈베를린-브란덴부르크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〉



- 베를린-브란덴부르크 도시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국의 그린벨트와 유사한 형태의 그린벨트 조성이 추진되었음
 - 향후 북한 도시개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
- 3) 제3 발표 (이상준): 한국과 독일의 도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
 - 미래 한국의 통일시대 도시정책 수립측면에서 동서독의 도시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
 -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도시화를 이룩한 반면에 북한의 도시화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

- 남한이 2010년에 82%의 도시화율을 보인 반면 북한은 60%수준에 머물고 있음
-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제도하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

〈남북한의 도시특징 비교〉

	South Korea	North Korea
Urbanization (%)	81.9	60.2
Number of cities	84	27
Land Use	Residential, Commercial Industrial, Green	Residential, Industrial Logistics, Transportation Public facilities, Green (location of manufacturing in inner-city)
Stakeholders of urban development	Civil, government	Government, Military
Similar issues	Over-concentration on capital region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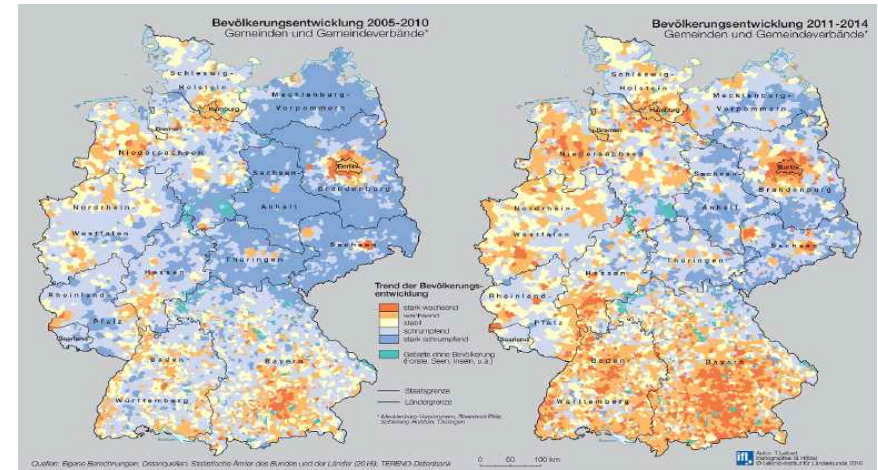
- 분단 이후 서독이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구조를 발전시킨 반면에 동독은 단핵 중심형 공간구조를 발전시켜 왔음
- 동독은 사회주의 시절 전체주의이데올로기 하에서 아파트 중심형 주거공간을 발전시켜 왔으며, 현재의 북한 도시들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
-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들은 교외화 현상 등으로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구조로 변모하고 있음
-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, 구 도심의 활성화, 인프라의 개선 등과 같은 과제들을 안게 되었으며, 향후 북한 도시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과제들을 안게 될 것임
- 북한의 함흥시는 구 동독의 기술자들의 지원하에 전후 복구를 이룩한 사례임
- 구 동독의 도시들과 북한의 도시들은 전후 도시파괴로부터 도시개발을 시작한 유사점이 있으며, 아파트 중심의 주거특성, 낙후된 주거환경 등과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음
- 반면에 현재의 북한 도시들은 통일 당시의 구 동독 도시들보다 물리적인 여건이나 인적 역량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
 - 특히 북한 도시들은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
- 남북한 도시와 동서독 도시의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

- 통일 이전에 북한 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남북간 인구이동의 요인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
-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해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

4) 제4 발표 (TIM LEIBERT): 독일의 최근 인구변화 추세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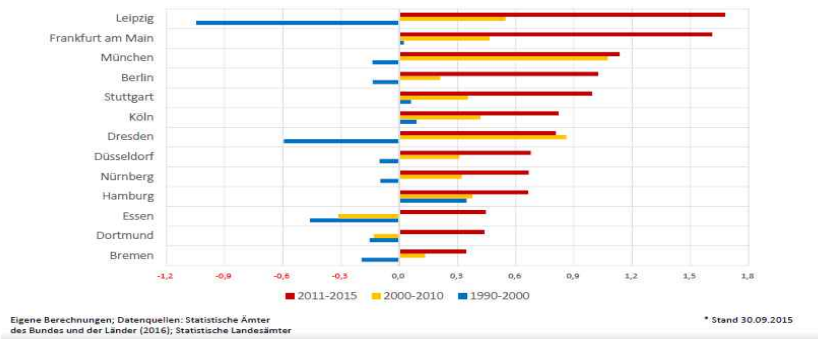
- 동독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2005-2010년에 비해 2011-2014년에 그 수준은 다소 완화되고 있음
- 서독지역의 경우 남부지역의 인구증가 추세가 2005-2010년에 비해 2011-2014년에 크게 강화되고 있음

〈동서독지역의 인구변화 추세〉



- 동서독지역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들은 1990-2000년에 비해 2000-2010, 2011-2015년에 인구감소의 폭이 더 커지고 있음

〈동서독지역 대도시들의 인구변화 추세〉



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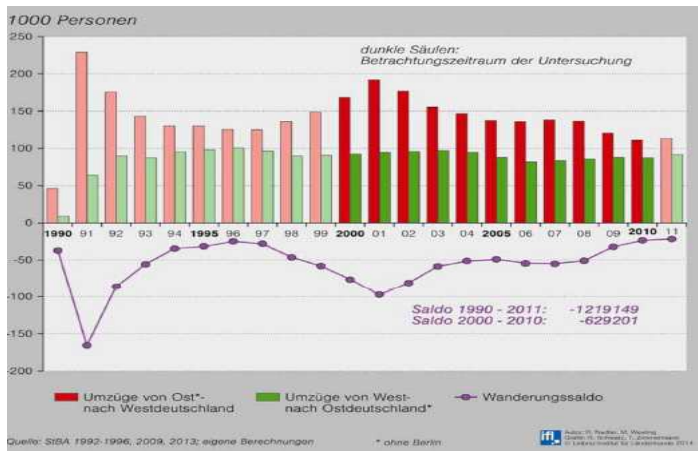
- 농촌지역과 중소도시들은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

○ 북한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

-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들 가운데 평양 등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예상됨
-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간의 인구이동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임
- 통일 후 북한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임

○ 동서독간의 인구이동은 1990-1997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1998-2002까지 서독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증가를 보였으며, 그 이후 다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〈동서독간의 인구이동 추세〉



○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이 가능함

- 동독지역의 대도시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, 주변지역으로의 도시권 확산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
- 농촌지역과 중소도시들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

3. 출장효과

○ 향후 통일관련 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

-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및 독일의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

강화하여 통일대비 정책 수립에 활용

○ 국제워크숍 및 간담회 결과를 국토교통부 수탁과제로 수행중인 남북한 국토·도시분야 제도통합방안 연구의 향후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

- 동서독의 정책경험과 시사점을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제도통합관련 정책적 과제 도출에 반영 <끝>.